

## 더 커진 격차...계층간 불균형 최악 하위층 감소폭 통계집계 이후 최고

상위 20% 소득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18% 급감하는 등 하위 40%(1~2분위) 가계가 소득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은 역대급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4분기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인 1.8% 증가해 5분기째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만8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었다. 감소폭은 3분기(-7.0%)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근로소득은 36.8% 급감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다. 사업소득도 8.6% 줄

어졌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77만3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든 반면 3분기(-0.5%)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1.8% 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천원으로 10.4% 증가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역시 4.8% 늘어 2012년 4분기(5.1%)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

장 악화했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 상승했다.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분기 기준 2015년 4.37배를 저점으로 2016년 4.63배, 2017년 4.61배로 등락하다 이번엔 상승폭이 커졌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 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업 기자 esaca@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 지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육체노동 가동연안' 60→65세로 상향 보험업계 긴장...정년 상향 논의도 예상

대법 전원합의체 '60세까지 가능' 판례 30년만에 변경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가동연령'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뜻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적상 가동연령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령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령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령을 63세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김재형 대법관은 "특정 연령을 단정적으로 선언하지 말고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

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판결이 선고되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동가동 연령이 상향되면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령,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에도 노동가동연령 상향이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졌던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경우엔 고용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실업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늘어나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가 발생해 10%대인 현 청년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김민수 기자 mski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지역인재 채용 확대·광주수영대회 협력"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다른 지역 혁신도시보다 크게 낮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올해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는 21일 나주 한전KDN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제4대 공동협의회장인 이영섭 광주시장과 박성철 한전KDN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범년 한전KPS 사장 등 공공기관장 2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협의회 운영 성과와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이용섭 공동협의회장 주재로 2019년 공동과제 선정(3건), 공공기관장협의회 규약 개정(안) 의결, 제5대 공동협의회장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의회는 2019년 공동과제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 △혁신도시 사회공헌활동 협력 추진 등 3건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2022년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인 30%를 올해 안에 조기 달성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

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1.5%로 대구 41.3%, 강원 31.7%, 부산 26.6% 등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와 관련 이 시장은 "공동혁신도시 협의체 당시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이 이전기관의 지방세를 기금으로 조성해 다른 지자체에도 효과가 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며 "2013년 이전이 시작된 후 7년째인 지금까지도 조성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